

위기에서 완만한 탈출, 고용의 양과 질은 여전히 회복 안 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세계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의 그늘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성장 전망과 고용 전망이 기대보다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에서 완만한 속도로 벗어나 2014년에는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2014년에는 2008년과 비교하여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고용증가는 더디며, 경제성장률도 기대만큼 높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아 실업수당이 끊긴 장기실업자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양적 완화의 종료에 따른 테이퍼링과 공화당의 고집스러운 예산삭감정책 때문에 예산긴축정책이 취해지면서 연방예산 지출이 줄어들어 경기회복과 고용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예산삭감과 부채 누적으로 공무원 수가 2007~2013년 사이에 약 52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이 전일제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에 연계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2014년 2월 현재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실업자 1,020만 명(실업률 6.6%) 가운데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의 폐지로 총 360만 명인 실업자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심화되어 온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낮추기 위해 2009년 이래 동결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2013년 12월까지 13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2월 12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부터 10.10달러로 39.3% 인상하는 집행명령에 서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 1,65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파급효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던 근로자 8백만 명의 임금도 덩달아 올라 전체적으로 2,450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분석했다.

독일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위기 이후에도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독일의 고용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독일의 고용증대와 실업률 저하는 중고령자들의 퇴직연령이 늦춰지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없이 단축근무 등으로 고용유지를 했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또한 여성고용도 미니잡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로 크게 늘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니잡,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상·하위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관계의 집단적 규율이 약화된 데에 기인되는 것으로 더구나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확대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2013년 11월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타결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 집권 기민당의 지지기반인 사용자단체들이 반대를 했으나 대연정을 위해 사회민주당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를 수용한 것이다.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은 시간당 8.5유로(11.54 미국달러)로 2015년부터 시작되는데 전체 근로자의 20~25% 정도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새로 구성된 기민·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을 통해 중도적인 고용과 노동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이래 재정지출 감소를 위해 각종 복지 예산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취해 왔다. 이런 긴축정책은 경제불황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황 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2008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 2012년에는

0.1% 성장이라는 긴 불황 끝에 2013년 1.4% 성장하였고, 실업률은 2011년 8.4%에서 2년 만인 2013년 말에는 7.1%로 1.3%포인트가량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임금 하락, 공공부문 고용축소, 복지혜택 축소, 최악의 고용형태인 0시간 계약제¹⁾ 증가 등에 대항하여 2013년에는 노사갈등, 노정갈등의 파고도 높아졌다. 실업률도 여전히 7%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환율정책에 힘입어 고용이 늘어나며 임금인상률도 약간 상승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수익이 늘어난 것을 고용확대나 임금인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 사용자단체인 경단련이 입장을 밝혔으나, 동시에 기업별로 사정에 따라 대응하면서 총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어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1~2%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의 그늘 아래 임금교섭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과거에 비추어 임금교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일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파견노동이 문제가 되자 민주당 정권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강화가 논의되었으나 2014년 들어 파견노동의 규제완화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인 세계경기의 느린 성장세로 중국의 대외무역과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졸자들의 구직난과 숙련된 기술인력 및 단순 생산인력의 구인난에서 보이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고 동부연해지역에서 생산요소의 가격급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높은 GDP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 및 그보다 거의 두 배가량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과 물가인상 등으로 여전히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73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회주의국가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0~2011년에 비교적 많이

1) 편집자 주 : 호출형 근로 등 여러 가지로 일컬으며,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어났던 노사분쟁이 2013년에는 줄어들어 2014년에도 안정적인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4년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노동·고용정책의 중요한 변화보다는 2008년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그림자가 크게 열어질 것으로 보인다. **KLI**